‘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선거투쟁과 정치세력화

투쟁노선의 분화를 중심으로

김영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논문요약〉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과 선거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전노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은 선거투쟁을 둘러싼 투쟁노선의 분화과정이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지점에서 전노협 선거투쟁의 노선이 분화되었던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노협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이었다. 둘째,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분화였다. 셋째, 선거투쟁의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에서 나타난 분화였다. 투쟁노선의 분화현상은 이념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정파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었다. 정파운동의 주체들은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이었다.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의 주체들은 전노협과 함께 선거투쟁에 참여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정치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전개했다. 대표적인 활동은 노동자 교육운동을 통해 기본적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활동, 노동자들의 계급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는 활동,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정치운동의 주체들을 양성하는 활동, 국가와 자본에

대한 투쟁전선을 강화하는 활동,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규합하는 활동 등이었다. 전노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민주노동당을 결성하는 역사적 디딤돌이었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을 고양시켰다.

■ **주요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노동자 정치세력화, 선거투쟁, 투쟁노선, 분화

1. 문제제기

1970년 전태일의 분신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민주화 투쟁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자신의 조직적·계급적 주체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를 건설했다. 전노협은 1990년 1월에 출범하여 1995년 12월에 해산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과 민주화운동과의 연계 고리들을 만들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결성의 주도적인 주체로 나선 이후, 200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면서 그 힘을 발휘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투쟁, 2008년 국회의원 선거투쟁, 그리고 2010년 지자체 선거투쟁에서도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11년 현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적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전노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각종 선거투쟁을 역사적인 디딤돌로 삼고

있다.

전노협은 1991년 지자체 선거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결성하기 위한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정당에 재정·인력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전노협은 조합원들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각종의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세력이나 범민주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세력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던 전노협의 선거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운동의 전국 조직은 계급적인 선거투쟁을 조직하면서 조합원들의 불균등한 의식상태 및 노동조합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의 불균등성을 계급적으로 통일시키려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도부나 간부, 그리고 조합원들은 투쟁노선을 분화하는 논쟁의 중심 주체로 나서게 된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선거투쟁의 단일하고 통일적인 노선을 전체 조합원에게 강요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노협의 정치세력화투쟁 및 선거투쟁도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투쟁노선의 분화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은 전노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 조직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했던 선거투쟁과 그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전략적 노선의 분화현상 등을 규명하면서, 그러한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려 한다. 특히 전노협은 조합원 대중들의 불균등한 정치의식을 조합원들의 조직이라는 특성상 선거투쟁의 전략과 노선에서 다양하게 분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러한 분화가 전노협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의 문제를 분석·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실의 선거투쟁이 20여 년 전에 전개되었던 전노협의 선거투쟁을 디딤돌로 삼고 있는 역사 속의 현실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현실인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노동조합이 주도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주성수(1992)는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당 주도-우위형, 노조 주도-우위형, 당-노조 공생형"의 모형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카슬로우(E. M Caslow 1983)는 "개별적인 독립체, 상호의존관계, 당우위관계"로 유형화하고 있다. 또한 정영태(1993)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 현재까지 일본의 전국적인 노동조합연맹과 사회당의 "강령비교, 조직건설과정, 사회당내 주도권 세력의 분포 및 의사결정 구조, 국회의원의 출신배경과 비율, 당의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하여 "노조 우위-주도형"의 사례를 밝히고 있다. 신중현(1996, 18-24)과 오삼교(1999, 79-127)는 브라질의 노동자당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동자당 건설의 정치·사회적 조건, 노동자당 추진세력과 제도권 야당과의 관계, 노동자당과 가톨릭교회와의 관계, 노동조합과 당의 이중 멤버십, 당과 노동조합의 선거정치" 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조직주체 형성 및 상호연대관계 형성의 주도성 여부, 정당의 선거정치 지지기반의 상태 등을 대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당결성의 동력, 노동자 정치조직과 노동조합 간의 상호연대관계 형성 및 조직주체 형성과정, 의회와 선거를 활용하는 활동, 정당에 대한 지지 정도 등을 규명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과정 및 선거투쟁의 노선 때문에 노동조합 내부가 분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 사례를 이념형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특정한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선거투쟁의 다양한 노선까지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파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선거투쟁의 비공식적 현

상까지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렌수엘라(1992)는 유럽과 중남미 지역 국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인 변수로 규명했다. 그는 정당과 노동조합 간의 관계를 양 주체의 긴밀성 정도, 즉 '긴밀한 관계이냐 느슨한 관계이냐'라는 문제를 변수로 하여 정당과 노동조합 간의 연대관계를 규명했고,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결속, 노동운동의 통일과 분열,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의 지원, 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원,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자본의 대응'을 변수로 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을 "사회민주주의형, 경쟁주의형, 압력집단형, 국가후원형, 갈등대립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했다. 발렌수엘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념형적 유형으로 범주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정치활동의 내용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적인 목적을 변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발렌수엘라는 노동조합운동의 통일과 분열, 즉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으로 통일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지만, 노동조합 내부의 투쟁노선을 둘러싼 정파적 분화현상은 분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라는 특성상 정치세력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정파세력까지 포괄하지만, 정파적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투쟁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소위 87년 체제가 수립된 이후, 전노협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노동조합의 투쟁 및 그것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노동자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퇴보한 민주주의·신자유주의 정책 및 시장 중심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규명하려 했다(최장집 2010). 『민주주의의 민주화』도 노동조합운동과 민주화운동 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지 않고 있다. 단지 노동조합운동의 활동들은

민주화운동으로 분석·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기활동만으로 분석·평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곧 노동조합운동을 이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계급조직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측면 중에서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과 다르게 전노협을 사회적 계급조직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전노협의 조직발전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평가(김금수 1993; 임영일 1992)한 경우도 있었고, 전노협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탄압 및 활동의 내용, 그리고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의 활동 내용들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분석·평가하기도 했다(김진균 외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전노협을 학술적인 분석·평가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전노협을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석·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전노협의 활동을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석·평가한 연구, 예를 들면 국가의 억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노협을 분석·평가(노중기 1997; 김영수 1999)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세력화나 노동운동의 전략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문제제기도 활성화되었다(전태일기념사업회 1991; 최장집 1992; 199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정치활동의 보편적 방법 중의 하나인 선거투쟁을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전노협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선거투쟁과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노선이 분석되지 못했다.

전노협의 해산 이후, 전노협의 방대한 활동이 백서의 형태로 발간되었다(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1997). 전노협 백서는 전노협을 보다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고, 이를 토대로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이념비교(안태정 2010), 계급주체 형성과정으로서의 전노협(조돈문 2010)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그리고 전노협의 해산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조직(National Center)인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김영수 2007)도 있지만 전노협의 선거투쟁을 중

심으로 하는 정치활동, 특히 정파세력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선거투쟁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차이, 선거투쟁에서 드러난 전략과 전술의 분화현상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대상들은 계급의식 및 정치의식의 분화현상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및 정치의식은 매우 불균등하게 존재한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량은 "계급을 둘러싼 거시적 변수와 미시적-개인적 변수를 통일시켜 내면서 계급의식 및 정치의식으로 규명될 수 있다고 했듯이(Wright 2009)," 전노협의 선거투쟁에서 드러났던 노선의 분화현상은 노동자들의 계급 및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3. 전노협의 선거투쟁과 투쟁노선 분화

전노협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물적 토대를 형성·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담지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인식의 편차 및 노동자들의 불균등한 정치의식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건설의 전략조차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전노협은 대한노총과 한국노총의 정치활동방식, 특히 노동조합의 지도부로 활동하다가 의회로 진출하는 방식만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간주하는 정치활동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대의정치를 계급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 조직적으로 지원·지지하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활

동,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자 계급정치가 정당하다고 선전하고 교육했던 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을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했던 정치적 총파업 투쟁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1990년 전노협을 건설할 당시, 노동자들은 전노협을 건설하고 사수하는 것부터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노동운동의 탄압에 대응하는 투쟁, 그리고 자신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 등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사안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는 정치적 투쟁노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전노협이 1991년 지자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선거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 투쟁노선의 분화가 본격화되었다.

1)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의 분화

전노협의 지도부나 활동가들이 설정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 각각의 관점들은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서노협 의장과 전노협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영대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방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전노협은 무조건적인 투쟁만 주장한다거나 또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운동의 기본적인 자세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사회세력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구축하고, 그러한 사회세력화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강화하는 것이 곧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입니다(김영대 1994/01/23)." 그런데 사회세력화는 "노동조합이 이익집단으로서 특수이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

력, 노동자의 조직이 다양한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이슈에 노동자가 개입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 선거정치에 대한 개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이 대안적인 제도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된다(김영대 1995, 16)"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제도정치에 압박으로 가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세력화, 특히 제도권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화 이행의 동력을 사회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거투쟁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간주했다. 주로 전노협 내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운동 노선'을 지향했던 우파적 경향의 지도부나 간부들이 이러한 투쟁노선에 찬성했다.

제1~3대 전노협 위원장을 역임했던 단병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당 건설만은 아닙니다. 정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대중들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세력화의 과정입니다. 즉 정치운동단체가 갖는 대중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말이 실제화되도록 보다 폭넓은 정책개발과 사업, 그러한 사업을 통해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편집부 1994, 24)."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들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역량을 정당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전국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화하려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을 위한 전노협의 사업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고, 노동조합 내 대부분의 지도부나 활동가들도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만이 곧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라고 보지 않았다. 소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날개론,' 즉 정당을 한 축으로 하고 노동조합을 다른 한 축으로 접근했던 중앙파적 경향의 지도부와 간부들이 지지했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

성 강화에 먼저 중점적 노력을 다하고 그 이후에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 노조 활동가들이 진보정당 건설에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편집부 1995, 19).”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려 했던 전노협의 지도부나 활동가들은 전노협의 주류적 관점에 비판적이었다. 전노협의 제4대 위원장이었던 양규헌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노협의 지도부나 활동가들이 노동자·민중의 정당에 발기인이나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각종의 선거투쟁에 후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건설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역동적인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지도부나 간부들만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정치의 전면적 주체로 나서는 것이 곧 노동자 정치세력화인 것이다(양규헌 2010/05).” 당시 전노협 간부는 “노동자 대중들은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투쟁의 구체적인 승리, 즉 전노협과 노동자·민중정당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선물일 것이다(김종배 1997, 10)”라고 강조했다. 전 전국노련의장이었던 이종회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주류적 관점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의 정치활동이 민주노조운동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전노협은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업종회의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노선을 희석화하기 위해 1991년 5월 강경대 살인규탄투쟁과 박창수 옥중살인 규탄투쟁 이후부터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직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이종회 1995, 10).” 전노협의 이러한 조직화 전략은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투쟁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에서 제기된 세 가지의 관점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목표, 즉 계급적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은 서로 공유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건설하는 주체, 목표, 시기 등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첫째,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독자적으로 건설하기보다 제도권 야당을 포함한 범민주 세력의 역량으로 민주화를 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조직적·계급적 역량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치중했던 관점이다. 둘째,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즉각 건설하는 것만이 곧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곧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분화되어 왔던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이 1991년 지자체 선거부터 전노협의 투쟁노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노협 지도부나 활동가들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7년 대투쟁의 과정에서도 일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에 대해 개입했지만, 1988년서부터 지노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자 정치조직의 활동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했고, 특히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전노협 내부에 정파세력들이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김승호 2010)."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싸고 서로 분화되었고, 전노협의 지도부나 활동가들도 노동운동단체나 노동자 정치조직의 주요 주체들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전노협에서 드러난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노동자 개개인의 정치의식이 매우 불균등하고, 또한 계급적 정치활동의 경험이 매우 일천했던 상황, 그리고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의 활동이 주도적이었던 점에 비추

어 본다면, 전노협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은 지도부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전노협 조합원들은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의 조직원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주변화되거나 파편화된 정치적 정체성을 보유했다. "계급의식 및 정치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획득하는 정치투쟁이 되며, 이런 투쟁이 없다면, 집단을 통해 자신 스스로 집단과 동일시하는 하는 자기 정체성은 주변화되거나 파편화되기 때문이다(Porta & Diani 2006, 111-112)." 노동운동단체나 노동자 정치조직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세력화를 단계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혹은 동시적으로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 조합원들을 정치세력화 투쟁의 주체로 설정할 것인가 혹은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선거투쟁의 목표를 득표의 확대에 둘 것인가 혹은 정치적 대중투쟁의 활성화에 둘 것인가의 문제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전노협의 선거투쟁의 주체형성 및 전략전술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

2) 선거투쟁의 전략적 주체형성을 둘러싼 분화

1987년 이후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주체를 형성하려 했다. 하나는 노동자 대중들의 전국적 대중조직인 전노협의 건설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전노협은 한편으로는 선거투쟁과 무관한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노동자 계급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투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부르주아 선거정치의 장점을 활용하는 대신에 단점을 극복하려 했다. 1991년 지자체 선거부터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전노협의 선거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다양한 정치활동 중에 주요한 한 축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후 선거투쟁의 전략적 주체였던 정당을 결성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좌익-사회주의 역량이 선거에서 득표율과 득표력을 하락시키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통제한다.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정당의 결성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계급적 선거투쟁은 제한하는 대신에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정치활동은 장려된다(Therbon 1984, 20-22)." 전노협의 정치세력화투쟁 및 선거투쟁도 부르주아 계급의 노동자 통제전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전노협은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금지조항' 때문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치적 노동운동의 주체 및 합법적 민중정당운동의 주체들과 함께 선거투쟁에 참여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법·제도적 틀 내에서 작동하는 정당만을 선거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전노협 선거투쟁의 전략과 노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의 주체형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었다.

전노협의 지도부나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선거와 의회투쟁이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한계 내에서의 열려진 정치지형 속에 사회적 역관계를 보다 유리하게 반영시키는 것, 이를 통해 구조적 한계 내에서 자본주의를 민주화시키는 것, 보다 유리한 투쟁지형의 창조와 국가기구내의 저항의 센터 확보를 통해 국가 내에 계급투쟁과 모순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변혁의 보다 유리한 반작용과 개입을 유도해낼 수 있다(손호철 1992, 50)"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투쟁의 전략적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 특히 노동자·민중정당의 건설을 둘러싼 내부논쟁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당시 전국노운협도 독자적인 노동자·민중정당의 건설을 둘러싼 내부논쟁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었고, 전민련 내부에서 이탈한 세력들도 이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결성시기, 결성방법, 합법성 여부, 결성주체 등의 지점에서 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1] 노동자·민중정당의 건설을 둘러싼 논쟁의 다양한 요소들이 곧 노선논쟁의

핵심이었다. 전노협의 지도부와 간부들도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참여했고, 논쟁의 결과로 나타났던 선거투쟁에 대한 정파주의적 투쟁노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노협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 건설투쟁 및 선거투쟁의 노선에서 세 부류로 분화되었다. 주요한 논점은 정당을 결성하여 선거투쟁에 참여할 것인가 노동조합 스스로 선거투쟁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투쟁의 후보를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내포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또 다른 논점은 정당의 합법성 여부와 사회주의 전략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첫째, 합법적 정당건설운동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 스스로 선거투쟁의 주체로 참여하자는 세력이었다. 이 세력들은 주로 "국민연합의 선거불참 선언으로 각 지역·지구의 자율적인 결정과 역량에 맡기기로 결정하자.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전교조 또는 전노협의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도 했다(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제3권 1997, 233-242)." 이러한 투쟁노선은 전국노운협에서 제기되었던 선진노동자 조직론, 즉 전국노운협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선진적인 활동가들을 조직화하고, 그러

---

1)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선진 노동자들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는 선진노동자 조직론, 합법정당으로의 전화를 통한 정치적 노동운동 강화론, 정치적 노동운동의 투쟁전선 강화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선논쟁은 전국민족민주연합과 전국노운협 내부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 36시간의 마라톤 토론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만을 확인했다. 마라톤 토론은 분화를 전제로 혹은 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결국 전국노운협 내부에서 전개된 전략적 노선논쟁은 노동운동단체의 조직발전전망을 둘러싼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대중조직으로의 흡수통합, 통일전선적 노동자 대중단체로 존재, 독자적인 정치단체로 재구성이라는 경향성(김명시 1989, 109-123)'으로 대표되었다. 논쟁이 전개되면서, 선진노동자 조직론은 대중조직으로의 흡수통합론으로, 정치적 노동운동 강화론은 독자적인 정치단체 재구성론으로, 그리고 정치적 노동운동의 투쟁전선 강화론은 통일전선적 노동자 대중단체론으로 전이되었다. 한편 전민련에서는 합법적 민중정당 건설론이 제기되자, '건설 시기상조론, 건설 불가론, 건설 정합론'으로 분리되어 논쟁을 전개했다. 결국 전민련도 내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합법적 민중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조직에서 이탈했다.

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중민주진영의 전국적인 통일전선조직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투쟁노선의 연장이었다.

둘째, 민중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하는 세력이었다. 민중당의 경우, 1990년 6월 창당발기인대회 당시 창당발기인 1,143명 가운데 500여 명이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였고, 당원은 2,000여 명이었다. 전노협 중앙위원의 다수가 개별적인 차원에서 민중당 발기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대중공업의 선진적 활동가들 60여 명이 민중당의 현장조직원들이었다. 특히 민중당은 전국 17개 도시에서 결성된 '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가 당의 기간조직[2]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성격을 강화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민중당은 상층 중심의 정당 건설방식을 지양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선진노동자들을 합법적 민중정당운동의 핵심주체로 조직화하려 했다. 1991년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해고자·노동자·전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총 11명이 민중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셋째,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경우이다. 이들은 1991년 12월 15일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1992년 1월 19일 발기인대회를 마쳤다. 총 29개 지부 3,520명의 발기인 대부분이 노동운동의 주체들이었으며, 1991년 12월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발족 당시 당원은 4,000여 명에 달했다. 1991년 12월 15일에 개최된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위원

---

2) 민중당은 '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둘러싸고 "대중운동 대응조직론, 외곽조직론, 기간조직론"으로 논쟁을 전개하다가, 당의 노동자위원회를 조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을 살린다는 전제하에 당의 기간조직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노추의 당내 위상을 놓고서 "당내에 독자적인 의결과 집행체계를 갖고 대의원을 선출하는 노동자조직을 건설하자는 안과 당의 노동계급화를 도모하는 과도기적 정책협의체이자 조직단위로 구성하자는 안"이 논쟁을 벌이다가, 당의 골간구조의 지휘계통 아래 존재하는 대표자회의체로 전화되어 각급 대표자들이 모여 정책을 수렴, 행동, 실천을 위한 대표자 조직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그를 위해 내부의 의결, 집행체계를 갖기로 했다(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1990/08/15).

회 발족식에 다수의 민주노조운동의 지도자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예를 들면 박종현 광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한경석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자 인천지역노동조합협회 의장직대, 김길용 구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경은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부의장, 백순환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등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민중당과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92년 2월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된 민중당을 중심으로 1992년 4월 총선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전노협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원인은 주로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주도성 싸움, 정파별 이기주의, 개량주의·합법주의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오세철 1992, 63)"이었다. 즉 전노협의 지도부나 간부들은 노동자·민중정당의 합법성 여부 및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목표를 정강정책으로 표시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전개했다. 또한 전노협에서 정파주의적 헤게모니 투쟁을 전개했던 주체들은 노동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1980년대 정파운동을 전개했던 조직들이었다. 이러한 정파주의적 조직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대중조직 내부의 주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역량, 특히 조합원들이나 활동가들을 정파주의적 노선에 동원하려 했다. 전노협의 지도부나 활동가들이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의 전략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화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였던 것이다.

3)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분화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은 1987년 이후에 전개된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에서 두 가지 노선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노동자·민중이 독자적인 정당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노선과 제도권의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선거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과를 추구해야 한다는 노선이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의 전략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당을 결성하려 했던 세력들은 독자적인 후보전술을 채택했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던 세력들은 제도권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전술을 채택했다.

이러한 논점의 차이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당결성 및 후보론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선거투쟁을 조직적·계급적으로 전개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의식과 투표행위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당결성 및 후보론을 비판했던 세력들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위가 탈계급적이고 개별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착목하면서, 제도권의 보수세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선거투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불균등한 정치의식과 투표행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내에는 '독자정당 건설세력과 범민주진영의 단일야당 건설세력'이 공존했고, 이들 세력들은 노선을 둘러싼 투쟁을 전개하다가 분화되었다. 범민주진영의 단일야당 건설세력은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에서 이탈했다. 두 세력 간의 핵심적인 쟁점은 합법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이었다. 범민주진영의 단일야당 건설세력은 '현 시기 합법정당은 국민 대중의 단일한 군중 정치조직으로 대중 의식화, 조직화의 기치이며 연합적 통일전선적 질서를 주도하는 정당이다'라는 입장이었다. 범민주진영의 단일야당 건설세력은 기본적인 투쟁전선을 반민주야합세력 대 민주세력(국민연합, 민연추, 평민당, 민주당) 간의 대결로 보면서 야권통합을 주도했다. 그러나 독자정당 건설세력은 합법정당을 민주변혁운동의 전술적 단위로 간주했다. 즉 합법정당은 합법적 투쟁을 중심

〈표 1〉 정치적 노동운동의 선거정치 참여 전술

	1987년 대선	1988년 총선	1991년 지자체	1992년 총선	1992년 대선
독자적 정당 건설 추진	전술적 독자 후보 (후보단일화)	군소정당의 독자 참여	합법적 민중정당의 독자 참여	합법적 민중정당의 독자 참여	전략적 독자 후보
독자적 정당 건설 포기	비판적 지지	평민연 가입	반민자당 후보 연합	재야입당	범민주 단일 후보

으로 의회 진출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의식화·조직화 사업으로 합법의 수준을 뛰어 넘는 투쟁도 수행하는 정당이었다.

이러한 분화는 1987년 대선부터 1992년 대선까지 지속되면서 전노협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영향을 미쳤다. 전노협의 선거투쟁도 전략과 전술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은 두 세력으로 분화되어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각각 독자적으로 추구했다. 1987년 대선부터 1992년 대선까지 전개되었던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987년 대선 이후 1992년 대선까지, 민족민주변혁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려 했던 세력들은 각종 선거투쟁에서 독자 후보전술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 했다. 반면에 1987년 대선 당시부터 범민주 세력의 대동단결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민주변혁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정당 건설을 포기했던 세력은 지속적으로 제도권 야당과의 정책연대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추구했다.

전노협도 노동운동단체 및 노동자 정치조직의 분화된 노선에 영향을 받았다. 전노협의 전략과 전술은 지도부와 활동가들의 분화된 투쟁노선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불균등한 정치의식을 반영하면서 수립되지

〈표 2〉 전노협의 선거정치 투쟁전략과 후보전술

	1991년 지자체 선거	1992년 총선	1992년 대선
투쟁전략	반민자당 장외투쟁	정책개혁투쟁	노동자선거대책본부 구성하여 노동법개정투쟁 및 조직발전투쟁
후보전술	노동자 후보 지지	독자 후보와 범민주 후보를 포괄적으로 지지	독자 후보와 범민주 후보를 포괄적으로 지지
투쟁과제	대중투쟁	공정선거 감시단	지지 후보 결정 및 공정선거 감시단

않을 수 없었다. 전노협이 선거투쟁을 전개하면서 채택했던 전략·전술과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다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전노협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대중투쟁으로 확보하는 투쟁전략을 채택하면서 노동자 후보를 지지하려 했다. 그런데 전노협의 전략과 전술은 대중조직의 특성상 조합원 대중들의 불균등한 정치의식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 그것은 또한 전노협 지도부와 간부들의 정파적 헤게모니를 서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채택한 정파적 연합이었다.

전노협은 1992년 대선에서 업종회의·전교조·대공장노조·제반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던 노동자선거대책본부(이하 노동자 선대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전노협 조합원들은 노동자 선대본을 중심으로 계급적인 선거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 선대본은 노동자의 대선투쟁을 활성화하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고, 구체적으로 '노동자 바른 투표하기 운동본부의 결성을 제안, 국민회의 발대식 및 공정선거 쟁취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결성준비모임 개최, 발족식 및 기자회견, 검찰청 항의방문, 선전물 제작 배포, 공정선거감시단 발대식 및 가두 홍보캠페인, 고용안정쟁취와 민주대개혁을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 명동성당에서 공정선거 감시실천위원회 주최의 단식농성 참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노동자 선대본은 '국민회의 노동자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지침서, 국민회의 노동자 선대본 대통령선거 세부지침' 등을 하달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구체적인 참여투쟁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노협의 이러한 투쟁과제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웠다. 전노협의 간부나 조합원들이 조직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거의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결정에 따라 선거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전노협은 후보전술과 투쟁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변혁운동 진영,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전노협은 모든 정파주의적인 세력의 노선을 대중조직이라는 정체성과 결합시켰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특히 조합원들의 불균등을 정치의식을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선거투쟁의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 행위자들이 그들 자신을 보다 포괄적인 집단화(broader grouping)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과정, 자기 자신을 여타 세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래서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은 정파주의적 연합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Porta & Diani 2006, 179)."

전노협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은 매우 포괄적이었고, 정파주의적 연합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선거투쟁에서 조직적·계급적 전략을 추구하려 해도, 그러한 전략은 대부분 노동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집행되었다. 전노협은 조직적·계급적 전략과 노동자들의 개별적 투표행위를 동시에 추구했다. 전노협은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독자 후보와 범민주 후보를 포괄적으로 지지하는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노협이 선거투쟁의 과제를 지지후보 결정 및 공정선거 감시단으로 제한하여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지역노동조합협의회는 이로 인해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여전술을 둘러싼 진

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각 지역의 전노협 간부나 활동가들은 정파주의적인 노선에 따라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매우 다양하게 채택해야 했다.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한 후보는 전혀 없었고,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노동자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이근원 1995/08, 74)." 이는 중앙의 정치방침의 부재, 즉 "중앙차원의 방침이 너무 늦게 결정되어 중앙의 관장력하에 선거투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각 지역별로 구성된 특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투쟁 사업을 전개한 곳이 매우 적었다(이근원 1995/08, 79)." 이러한 점 때문에 조합원들은 선거투쟁에서 전노협의 조직적인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선거투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화현상은 민주노총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되었던 진보정당 건설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2년 대통령선거투쟁에서 구사되었던 '범민주 단일후보' 전술은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노동자·민중들의 개혁적 요구들을 일정하게 반영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전략적 독자 후보전술은 선거정치 참여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정치운동의 통일적 대응, 정당건설투쟁의 지속성, 민주노조운동과 분화주체로서의 정당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전노협의 선거정치 투쟁전략 및 후보전술은 다양한 정파운동의 요구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 그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전 민중의 요구투쟁을 토대로 민중의 정치세력화 적극 도모, 민중민주진영과 연대구조 강화, 조합원 대중들의 정치의식 향상, 민중민주진영의 전국통일전선조직의 결정에 복무, 각 지노협의 조건에 따라 독자 후보전술에서 범민주 후보전술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전노협은 선거투쟁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쟁의 유발, 후보전술 논쟁의 유발, 후보전술에 부응하는 정치조직화 활동' 등이 분열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자 정치조직은 선

거투쟁의 후보전술에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화현상은 "노동운동의 비약적 자기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의 주요한 표현 내지 형태의 하나(채만수 1989, 126)"로 간주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이 포괄적이었고 정파연합적이었지만, 정파주의 운동은 조직 내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파주의 운동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선거의 무용론이나 노동조합 위원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자는 논쟁으로 파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파주의 운동은 "민중권력의 수립, 진보적 민주국가의 수립, 독점재벌 해체, 실질적 민주주의 정책의 수립, 민중적 민족통일의 달성(편집자 엮음 1988, 301)" 등의 정강정책을 여론매체 및 유세투쟁의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선전·선동하였다. 노동자들은 또한 제도권 야당과 제휴하여 의회로 진출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의회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인 행사장에서 자주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1992년 이후에는 '각종 행사장의 중앙단상에 올라오는 제도권 야당인사에 대한 야유와 비판'이 잇따랐다. 이는 제도권 야당에 대한 노동자 대중들의 의식, 즉 제도권 야당의 보수적 이념성과 반노동자적 정치활동에 대한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의식이 변화하는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4. 맺음말

전노협은 역사적으로 선거투쟁을 넘어서는 정치적 대중투쟁까지 자신의 권리로 내세우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을 전개하는 주요 동력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전노협의 선거투쟁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동자들의 불균등한 정치의식,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을 매개로 드러났던

정파주의적 전략과 노선 등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전노협의 지도부와 간부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정파주의 운동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노선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노협 건설의 실질적 토대로 작용했던 1980년대 정파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파주의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은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 양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파주의는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선거정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논의를 사라지게 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권력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투쟁과 함께 계급적 정파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논쟁과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모적이고 비밀리에 추진되는 정파주의적 토론이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논쟁과 토론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과 토론의 과정에서 비판은 있는데, 그 성과는 온데간데없다. 토론회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거나 결정의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치부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논쟁과 토론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각종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적인 평가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금수. 1993. 『노동운동론』. 한국노동교육협회.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김명시. 1989.『전노협건설과 노동조합운동의 현 단계』. 백산서당.
김영대. 1994/01/23.「전노협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 후보 유세」.
_____. 1995. “민주노총 창립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김영수. 1999.『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_____. 2007.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한국정치연구』16-2.
김진균 외. 1995.「전노협 6년의 역사와 활동 평가」. 전노협공동연구팀.
노중기. 1997.「한국 노동정치체제의 변동: 1987-1997」.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8월 콜로키움 자료
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1990/08/5.『노동자』5.
손호철. 1992.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선거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봄호.
신중현. 1996. “브라질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과 과제.”『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노조지도자 교육과정 2』.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안태정. 2010/07. “노동조직의 이념 비교: 전평, 전노협, 민주노총의 선언·강령 비교 검토.” 노동자역사 한내, 김진균기념사업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전노협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
오삼교. 1999. “브라질 노동자당의 건설과 시장.”『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오세철. 1992/02. “특별대담.”『사회평론』. 나남.
이근원. 1995/08. “노동자후보의 지자제선거 참가기.”『말』.
임영일. 1992. “노동자계급,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론.”『창작과 비평』19-2.
전국연합. 1995/11. “현 시기 정세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서면대담).”『현장에서 미래를』.
전노협. 1990.「가자! 총파업의 불길을 몰고 파업에서 해방으로!」.
_____. 1990.「국민연합 상반기 사업 평가지침과 자료」.
전노협 공동연구팀. 1995.「전노협 6년의 역사와 평가」.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1997. 『전노협백서』. 1990년부터 각 연도별 총 13권
전노협 지원공대위. 1990. 『90년 노동조합활동 탄압방침 자료집』. 1990
전태일기념사업회. 1991.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정영태. 1993. "민주적 노동자운동의 전개와 정당의 관계: 일본 총평과 사회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 5. 이론.
조돈문. 2010. "계급형성과정과 계급의식의 변화." 노동자역사 한내. 김진균기념사업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전노협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
주성수. 1992.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채만수. 1989. "필연적으로 예비되었던 분열이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었던 논쟁." 『80년대 사회운동논쟁』. 한길사.
최장집. 1992. "한국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문제: 1987-1992."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_____. 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_____.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카슬로우, E. M. 1983. "노동조합과 정당의 상호의존관계." 김금수·조한천 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형성사.
편집부. 1994.11.12. 〈단병호 대담〉. 《진보저널》.
_____. 1995.1.15. 〈문성현 대담(전노협 사무총장)〉. 《진보저널》.
편집자 엮음. 1988. 『팜플렛 조직노선』. 일송정.
Della, Porta D., & M. Diani. 2006. *Social Movements. Blackwell.*

김종배. 면담. 1997년 10월 27일. 서울 신림동에서.
양규헌. 대담. 2010년 5월. 서울에서.
이종회. 대담. 1995년 10월. 서울에서.

Therbon, G. 1984. "The Prospects of Labour and Transformation of Advanced Capitalism." *NLR,* No.145. 5-6.
Valenzuela, J. Samuel. 1989. "labor Movement in Transitions to Democracy: 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July.

_____. 1992.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ost-Transitional Settings: Notion, Proces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In S.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 J. Samuel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Notre Dam University Press.

Wright, E. O. 2009. "Understanding Class: Toward and Integrated Analytical Approach." *New Left Review,* Vol.60(Nov./Dec.).

투고: 2011.3.31 심사: 2011.5.11 확정: 2011.5.13